

2016년 촛불과 대한민국헌법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1. 대한민국헌법 제1조

2016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하는, 곧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펼쳐진 촛불집회는 참가자 수 역사상 최대라는 기록을 여러 차례 바꾸어 왔다. 100만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다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는 ‘탄핵’과 ‘구속’으로 요구하는 바를 바꾸었다.

거리와 광장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헌법 제1조의 실현이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2조부터 “대한인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61년 5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국가재건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부터 제2조는 제1조 ②항이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역시 박정희가 주도한 개헌의 결과로 잠시 이 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바뀌었으나, 1980년 10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부터 제1조 ②항은 현재와 같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바꿀 만큼 국민이 위력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사건은 모두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960년 4·19혁명이 그랬고, 1987년 6월항쟁이 그랬다.

1960년 4월, 그해 3월에 있었던 선거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국민들은 선거 무효와 대통령과 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국민은 결국 자유당 정권과 제1공화국을 물러나게 했다. 국민이 행사한 주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항의였다. 1960년 6월 15일, 내각제를 담은 네 번째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1987년 4월, 권력 장악 과정과 집권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아 오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호헌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항복하고 헌법을 개정해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6월을 정점으로 하는 1987년 항쟁은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항의였다.

2016년 가을과 겨울의 요구는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국가의 원수”의 권력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 대통령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작명한 정당,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주권이다.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대통령 선출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헌법 제1조의 침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이 확인되었다.

2. 이번 사태가 보이는 몇 가지 특징

무능함과 기괴함

하지만 1960년이나 1986년과 비교할 때, 이번 사태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먼저 현재의 ‘게이트’의 중심에는 희한한 문제가 놓여 있다.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름에 따르면, 작금의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다. 대통령 고유 업무를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쥐락펴락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왜 친인척도 아닌 인물에게 휘둘렸을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첩 공주”로 불리긴 했지만, 그때 국민들은 그냥 스타일 이거니 생각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조금씩 덧붙여지고 있는 예전의 일을 돌아보기로 하자.

2013년 8월,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을 때, ‘7인 회’라는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이러저러하게 인연이 있었으며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를 도운 강창희, 김기춘, 김용갑, 김용환, 안병훈, 최병렬, 현경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보 경선 패배 후에도 박근혜의 사실상 “비선” 참모 조직 역할을 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막후 실세”였다고 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사실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비선”이니 “막후”니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사건은 아니었다. 공과와 관계없이 그들은 ‘공인’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의 발상과 능력이 의심스러웠을 뿐이었다.

실세인 만큼 김기춘은 전임 허태열 비서실장과는 달리 비서실

을 다잡을 것이라는 것이 언론의 예상이었으나, 일 년이 좀 지나 이런 예상을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 11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보고서가 『세계일보』에 공개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 문제가 불명료하게나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되는 인물이 최순실이 아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희) 동향」이라는 보고서에는 언짢게도 중국 후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십상시+常侍’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과거 대통령의 비서였으나 당시에는 공인이 아닌 정윤희와 그가 대통령에게 천거하여 청와대에서 일하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이 문고리를 쥐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곧바로(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은 루머”라며 오히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정리했다.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던 박관천 경관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진술이 사실을 상당히 담고 있었다. 한국의 권력 서열은 1위 최순실, 2위 정윤희, 3위 박근혜.

이때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 몇 가지 있다. ‘문고리 3인방’ 등은 자신들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 승마 대회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나쁜 사람”)을 교체하도록 지

시한 사실이 있었는데, 정윤희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였으나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과 정윤희. 국민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오래도록 대통령 곁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었다. 또 한 번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할 뿐 주권을 도둑맞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정윤희가 최순실의 남편이며 최순실이 최태민의 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사태는 역대 정권에 있었던 측근의 비리나 권력 남용과는 결이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1974년 8월 육영수가 사망한 이후 최태민이 그 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는 사연과 함께, ‘빙의’나 ‘최면술’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도, 2012년 대선 때도, 최태민과의 관계는 박근혜 후보에게 부담이었고, 그때마다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음해성 네거티브 공세” 또는 “제가 아는 한 실체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그들을 감싸 주었다.

최태민은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 대통령의 불행했던 개인사와 관련하여 아름답게 이해하려는 국민도 있었는지 모르나,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며 대통령이 던진 “혼이 없는 인간”이니 하는 말에 국민들은 귀를 의심해야 했다. 독립적 인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된 사람, 게다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의심이 짙어 갔다. 미스터리

사건을 접한 듯한 분위기였다. 영세교, 오방낭, 우주의 기운, 관계된 인물들의 잦은 개명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21세기 민주공화국의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기괴함이 국민이 느끼는 사건의 발단이었다. 물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뽀뽀함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사태의 진상은 역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는데, 그때까지로 보자면 뜻밖의 문제가 뜻밖의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16년 7월, 《TV조선》은 재단 미르의 기금 모금 과정에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이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설립 두 달 만에 500억원을 모은 것은 청와대 입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라는 이름이 알려졌다. K스포츠라는 재단 역시 미르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도 보도했다. 굳이 덧붙이자면, 9월에 한나라당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송 주필은 사임했다.

그런 뒤 급물살을 타며 여러 사실이 밝혀졌고 그 중심에는 최순실이 있었다. 9월 20일 『한겨레』는 최순실이 두 재단의 실세라고 보도했다. 한 재단의 이사장은 최순실이 자주 들렀던 어떤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었다.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 시절 공약하여 도입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특별감찰관 ‘제1호’인 이석수가 “국기를 흔드는

일”을 저질렀다며 8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었는데, 그 감찰관은 7월에 두 재단의 모금 과정과 관련하여 안중범 수석비서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계에 이어 교육계에서도 최순실과 관련된 비리가 밝혀졌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관리에 관한 비리,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독일에 승마장을 구입해 제공했다는 이야기. 또한 최순실이 독일에서 더블루K라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를 세우고는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유입했다는 사실 따위가 밝혀졌다.

결정타는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었다. ‘대통령과 (영적으로) 가까운 민간인’ 최순실이 주권자인 국민보다 유리한 높은 위치에 서서 이익을 독차지한 영역(이것이 국립국어원이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서 유래했다며 밝히는 “농단壟斷/隴斷”의 뜻이다)에 국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필 그날은 대통령이 ‘개헌’ 카드로 국면을 뒤집어 볼까 했던 날이었다.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 대통령은 국민에게 해명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권자들은 그날의 대통령 이야기를 뻔뻔한 설명으로 들었을 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제정 시대 러시아에서 황제 아들의 병을 고친 후 황제 부부의 신임을 얻어 국정에 개입했다는 어떤 요승이 느닷없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여전히 사태는 매우 기괴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제 ‘최순실’이 전면에 떠올랐다.

모든 언론이 “단독 보도” 경쟁에 나섰다. 대통령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부녀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급기야 딸 최순실은 대통령 업무에 깊이 개입했다고 했다. 최순실 주변의 인물들이 고위 공직을 맡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으며,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최순실 인물들이 그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정책 수행에 필요하다며 재단을 설립했고, 재단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했다. 최순실의 딸에 이어 언니와 조카까지, 또 형성 과정이 의심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뉴스가 되었다. 농단할 국정을 놓고 정윤희와 최순실 사이에 쟁투가 있었다고도 했고, 이들의 이혼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영화보다 흥미진진한 것이 현실인지라 극장 관객이 줄었다는 것도 뉴스였다.

이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은 물론이고 특별검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제까지 보인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명예퇴직(하야)을 거부하더니 정리해고(탄핵)에도 맞서 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지, 청와대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말 그대로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뻔뻔함의 끝을 모르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만 뻔뻔한 것은 아니다.

몇몇 언론은 얼마 전까지 박근혜에게 보였던 태도와 관련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박근혜-최순실의 비리를 드러내는 경쟁에 나섰다. 한 가지 예만 들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4년 4월 19일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형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듣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 지휘에 직접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라는 찬양 기사를 내보낸 것은 『조선일보』였다.

새누리당 주요 인물들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몰랐을까?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라는 친박의 물 타기 전술은 전혀 주목을 받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 시절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 ‘친박’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개와 소가 웃을 이야기”다. 또한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연설문 초안이 “걸레가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에 책임감이 없었던 셈이다. 사라져야 할 세력에게 어울리지 않는 비상 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그들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함을 확인하고 탄핵소추가 가결된 뒤에야 “진짜 보

수”를 자임하며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른바 ‘비박’이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을 지지했던 ‘친이’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얻게 된 이름 아닌가? 박근혜와 가깝지 않으니 ‘소疏박’이라 불렸어야 했던 이들이 이제 ‘반反박’인 체하고 있다.

허탈감

태블릿 PC에 어떤 파일이 담겨 있었는지가 만천하에 알려진 후, 미르나 K스포츠 관계자였으나 최순실의 눈 밖에 난 인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구조였다고 했다. 아울러 최순실이 외교, 안보, 인사 등과 관련된 정보도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며 온갖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최순실의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쇼팽하는 최순실을 정중히 모시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반복적으로 화면을 채웠다. 대통령 ‘해명’ 다음 날인 10월 26일, 검찰은 최순실 집을 포함해 관계된 여러 곳을 뒤져 증거를 압수했고, 방송국 카메라는 명품 구두가 가득한 신발장을 비쳤다. 10월 28일,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 모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그리고 ‘국정 농단’에 항의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래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양상은 놀라울 만큼 평화적이라 할 수 있었다. 1960년이나 1987년과는 달리 어떠한 무장이나 폭력도 없었다. 경찰 저지선을 힘으로 넘어 보려는 이들에게 비탄이 쏟아지는 등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압도했다. 그 대신에 재치 넘치는 풍자가 있었다. 대통령 담화의 문구는 대통령을 향했고,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응답하여 LED 촛불이 등장했다. 뻔뻔한 세력에 대한 허탈감의 표현은 그런 식이었다. 주요 언론들, 특히 돌변하여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언론들은 집회가 끝난 뒤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따위의 “성숙한 시위 문화”를 부각시켰다.

광장에 모인 주권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대통령은 물러나게 돼 있다는 자신감과 흠 잡혀 사태를 그르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조심스러움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할 것이고, 절차에 따라 새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고, 등등, 철저하게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1960년이나 1987년에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 등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생각하면, 2016년 촛불집회는 폭력이나 위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7년에는 ‘비폭력’을 외치며 다른 참가자들을 설득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2016년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다.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도 거의 없었고, 특정한 기관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타격하는 일도 없었고, 기꺼해야 박근혜와 공범이라며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을 던질 뿐이었다. 시위 허용 구간을 결정하는 법원마저

경찰이 아닌 시위대의 편이었다.

다수가 모여 있는 광장에서의 행동 방식이 그렇듯이, 돌출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의 개별적 항의도 없었다. 최순실을 조사하는 검찰청을 향해 포클레인이 돌진한 사건과 딸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며 박정희 생가에 불을 지른 사건 정도를 해프닝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추잡함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밝혀지면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아직도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의 7시간.’ 탄핵소추안을 다루게 된 헌법재판소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그 의혹과 관련하여 오래도록 떠돌았던 이야기는 입에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 쓰기에도 낯 뜨거운 것이다. 그런 것 가운데 그나마 점잖은 것은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부인한 ‘굿’이었다.

최근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문은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다. 그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참으로 많은 민망한 일에 놀라야 했다. 대통령이 본명이 아닌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쓰고는 범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술을 받았다는 것과 그 병원은 물론이고 원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수

술용 실 만드는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공식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그 원장 가족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했다. 대통령 얼굴의 명이 국회 청문회에서 파헤쳐야 하는 문제가 됐고, 관련자들은 이러저러한 시술의 흔적임이 분명하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은 시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늘, 태반, 감초! 성형을 위한 주사의 종류에 대해 국민들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이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아울러 청와대가 그동안 구입한 약품의 목록도 공개되었다. 예전에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청와대에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 체육, 교육에 이어 의료까지, 도대체 제도에 따라 작동하는 분야가 있거나 한 국가인지 국민은 거리에서 묻게 되었다. “이게 나라냐?”

어이없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조롱이었다. 언젠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보고가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며 겸연쩍게 웃으며 실토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는 청와대가 고산병에 대비해 구입했다고 해명한 의약품과 그런 보고 방식을 연관 지어 조롱하는 글 천지가 되었다.

7시간 가운데 밝혀진 것은 올림머리와 관련된 것뿐이다. 성형이 아닌 미용이라도 무엇이 다를까? 청와대는 “오보 괴담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7시간을 해명하려 들고 있지만, 이제 와서 누가 진정성을 읽을 수 있겠는가.

사실, 2016년 끝머리에 광장에 등장한 팻말 “이게 나라냐”는 당시 세월호가 침몰한 과정을 처리할 때 답을 내렸어야 하는 문제였다. 2014년 그날, 기울어 가는 배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TV에서 보고 있던 국민은 그 배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가라앉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

별별 것이 다 들춰지고 있다. 어떤 행사장에서 옆에 섰으나 유독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지 않았던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추측과 박태완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최순실의 사람인 문화체육부 차관이 막았다는 이야기까지. 더 드러날 것의 끝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 대변인이었으나 대통령 방미 기간에 미국에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공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까지 다시 나타나 박근혜를 못 지키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추잡醜雜하다’ 만큼 이 사태를 잘 설명할 말은 없는 것 같다.

“독일의 상황에 전쟁을! 물론이다! 독일의 상황은 역사의 수준 아래에 있고 모든 비판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며, 이는 인간성의 수준 아래에 있는 범죄자가 여전히 사형집행인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의 상황과의 투쟁에서 비판은 두뇌의 열정이 아니라 열정의 두뇌다. 해부용 칼이 아니라 무기다. 비판의 대상은 논박하고자 하는 적이 아니라 절멸시키고자 하는 적이다. …… 비판의 본질적 과토스는 분노이며, 비판의 본질적 작업은 탄핵이다.” 칼 맑스가 160년도 더 전인 1843년에 헤겔의 법철학을 비판하기 위해 쓴 어떤 글에서 당시 독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다. 1980년대에 한

국에서는 1917년 이전의 러시아와 한국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당시 러시아의 운동을 참조했지만, 2016년 한국의 황망한 상황을 확인한 우리는 19세기 중반의 독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3. 30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개헌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반대편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묶어 그렇게 부르며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10년을 합한 20년이 아니라 1987년 이후 30년이 온데간데없게 될 판이여 두렵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도 헌법이 바뀌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어졌고,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으며, “경제의 민주화”가 헌법에 포함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모두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와 여덟 번의 총선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집권당이 바뀌는 역사도 있었다.

‘87년 체제’의 성립 자체가 항쟁의 결과이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확대되었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전쟁을 겪고 남과 북의 대치와 그 대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서 거의 유일한 원칙이었던 ‘53년 체제’가 종식된 것은 아니었는데, 집권 세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이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체제는 각각이 포괄하는 범위, 또는 특징이 되는 측면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87년 체제’의 종식이 한국 사회 변화의 방향으로 떠올랐다.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곧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과 양극화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도 이 또한 앞서의 두 체제와는 겨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모두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사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과연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체제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 한국의 달력은 1987년 이전을 가리키는 듯하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이다. 새누리당 탈당파의 ‘개혁보수신당’ 창당에서 시작된 이합집산이 아마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당 내부 후보 선출 과정이 관심사였던 지난 몇 차례의 대선과는 달리, 현재 주요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후보를 기존 정당이 영입하려는 시도나 그런 후보들 사이의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이다. 정당 사이의 ‘정책 대결’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네거티브 전술이 판을 칠 것이며, 게다가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의 문제로 인해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된 것이니 정책이 아닌 ‘도덕성’ 또는 ‘인격적 자질’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터진 후 청와대에서 생각해 낸 한광옥과 김병준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다음 선거에서 정책의 방향이나 과거의 경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기우로 그치길 바라지만, 심지어 대의제와 선거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날지도 모를 일이다. 추운 날씨에 주말마다 어마어마한 수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여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면, 그런 국가에서 주권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을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제67조)보다 포괄적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7공화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87년 체제’의 종식에 어울리는 논의라면 바람직하겠지만, 결국 물론 중심에 놓인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일 것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를 도입할 것이냐, 또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지금처럼 5년 단임제로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오래된 우리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투표 결과는 주권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폐지해야 한다.

모든 것을 떠나 현재의 헌법에는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 ‘부치다’와 ‘붙이다’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항이 무려 세 개나 있다. “여자”, “신체장애자” 따위의 표현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감수성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한 문장에 담은 전문前文은 단어들의 나열로만 읽힐 뿐이다. 언젠가 되든 다음 개헌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조교】**